

편집자의 말

##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

—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남기정 \_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이번 『일본비평』 6호 특집은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을 주제로 꾸몄다. 작금 중일/일중관계가 문제다. 중일수교 4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 새해 벽두부터 일본의 이시가키(石垣)시 시의원들이 센카쿠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다오위타이[钓鱼台])에 기습 상륙하는 사건을 둘러싸고 한바탕 벌어진 중국과 일본 간의 신경전이 이러한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시가키시 시의원들의 행동은 지난 5~6년 동안 지속적 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본 국민의 대중(對中)감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혐중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아시안컵 축구경기에서 중국인들이 보인 일본에 대한 극단적 반감이 계기가 되었다. 물론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이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잇따른 야스쿠니 참배로 불붙은 것이었음은 지적해 두어야 하겠지만, 일본인의 중국인에 대한 호감과 반감이 2004년을 계기로 역전되기 시작했던 것은 특기할 필요가 있겠다.

외교에 관한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일본인의 비율이 2004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 53.6%가 되었다. 그 비율은 2005년에는 63.4%가 되어 2009년까지 줄곧 6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0년에는 80% 가까운 사람들(77.8%)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는 1980년 조사에서 친근함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인 78.6%와 거의 맞먹는 것으로서 일본인의 대중감정이 30년 만에 극단적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수치이다.<sup>1)</sup> 1980년이면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수습하고 겨우 개혁개방에 나섰던 시점이고, 일본은 『재팬 애즈 넘버원』(*Japan as Number One*)<sup>2)</sup>이 전년도(1979)에 출간되어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이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2010년 중국은 GDP 규모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 1. 범람하는 중국론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장기적 침체에 따라 그 국제적 위상에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일본에서는 최근 10년 사이에 중국에 대한 천차만별의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02년에 출판된 『아시아경제 2002: 대두하는 중국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후지종합연구소 조사연구부 엮음)는 ‘중국의 대두’를 본격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최초의 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에는 『중국의 대두: 일본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출판되었다. 이 책은 중국위협론과 중국붕괴론을 모두 부정하고, ‘일중화해’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미래지향의 중국론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같은 해 제25회 산토리 학예상을 수여받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반대로 2004년 이후, 일본의 서점가엔 혐중론의 책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아마존 재팬’에서 ‘중국’을 주제로 검색(2012년 1월 현재)하면, 1990년대 말부터 2001년까지 연간 280권 안팎을 오가던 출판부수가 2001년에 357건으

1) 일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참조[<http://www8.cao.go.jp/survey/index-gai.html>, 접속일: 2012. 1. 10].

2) 에즈라 보겔(Ezra Vogel, 1930~) 당시 하버드대학 교수의 저서, 전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일본적 경영’을 지적했다. 일본적 특수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된 책이다.

로 급증했으며 2005년에 404권을 기록했다. 내용면에서 보면, 2003년까지 중국 고전, 역사, 문명/문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데 반해 2004년부터 혐중론 계통의 책들이 인기순위 집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004년에 인기순위 12위로 등장한 책이 『중국폭발』인데 이후에 나오는 자극적 반중국론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2005년에는 8위에 『미일은 중국의 패권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중국위협론의 원조 격인 책이 등장했는데, 같은 해 12위에는 『동아시아공동체: 강대국화하는 중국과 일본의 선택』이 올라 있어 강대해지는 중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도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출판시장에서는 이러한 균형감각이 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드디어 1위에 『중국은 어떻게 티베트를 침략했는가』가 올랐으며, 이어서 6위에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봉인된 현대중국의 암부를 검증한다』가, 그리고 8위엔 『중국은 일본을 병합한다』가, 12위엔 『신 미중전쟁: 폭주하는 중국, 봉쇄하는 미국』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일본을 병합한다』의 경우 독자 리뷰가 17건이나 달려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2008년도의 검색결과이다. 인기순위 1위에 『중국 장기(臟器) 시장』이 오른 것을 비롯해 『정말로 위험한 중국경제』, 『중국의 핵실험』, 『예속국가 일본의 기로』, 『불량국가 중국의 본성: 유린당한 티베트』, 『어울릴 수 없는 대국, 중국: 그들에게 마음을 쥐서는 안 된다』 등 12위 이내에 6권, 즉 절반이 혐중론, 중국위협론의 계통으로 분류되는 책들이었다.<sup>3)</sup> 일본인들이 최근의 국제관계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말해 주는 현상이다.

## 2. 중일관계와 한반도

그런데,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그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일관계는 한반도의 명운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더구나 한중일 3국이

(중국)대륙과 (한)반도, (일본)열도로 존재하며 동아시아의 전쟁사에서 여러 차례 엮혔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해 온 기록들을 반추해 보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가깝게 근대 이래의 역사만을 들추어 보아도, 중일관계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로 그려 볼 수 있다. 19세기 말 쇠락하는 제국과 흥기하는 제국 사이에 전개된 청일전쟁의 이미지, 20세기 전반 반식민지 해방운동과 제국주의 사이의 중일전쟁의 이미지, 20세기 중반의 공백기를 거쳐 사회주의 신흥국가와 자본주의 발전국가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이미지, 21세기 동아시아공동체의 이미지 등이다. 때로는 이러한 이미지들이 중첩되기도 하면서 중일관계는 그 단계마다 한반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조선이 일본과 불평등조약(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 국제법 체제에 편입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 운요호(雲揚号)사건이었는데, 운요호사건의 배경에는 ‘서계’(書契) 문제를 둘러싼 조일 간의 갈등이 있었다. ‘서계’란 전통적인 외교문서로,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이 유럽 국제법에 입각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조선에 요구하자, 이것이 ‘서계’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선이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고, 이에 따라 조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던

3) 이상의 책들을 언급된 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富士総合研究所調査研究部 編, 『現地取材版, アジア経済2002—台頭する中国とどうつきあうか』, 中央経済社, 2002; 津上俊哉, 『中国台頭—日本は何をなすべきか』, 日本経済新聞社, 2002; 中嶋嶺雄・古森義久, 『中国爆発—なぜ日本のマスコミは真実を伝えないのか』, ビジネス社, 2004; 日高義樹, 『日米は中国の覇権主義とどう戦うか』, 徳間書店, 2005; 小原雅博, 『東アジア共同体—強大国化する中国と日本の選択』, 日本経済新聞社, 2005; 마이kel·다ナム, 『中国はいかにチベットを侵略したか』, 講談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06; 宋永毅, 『毛沢東の文革大虐殺—封印された現代中国の闇を検証する』, 原書房, 2006; 平松茂雄, 『中国は日本を併合する』, 講談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06; 中嶋嶺雄・古森義久, 『米中新戦争—暴走する中国・封じ込める米国』, ビジネス社, 2006; 城山英巳, 『中国臓器市場』, 新潮社, 2008; 三橋貴明, 『本当にヤバイ中国経済—バブル崩壊の先に潜む双頭の蛇』, 彩図社, 2008; 高田純, 『中国の核実験—シルクロードで発生した地表核爆発災害』, 医療科学社, 2008; 北野幸伯, 『隷属国家日本の岐路』, ダイヤモンド社, 2008; 베마·ギャル보·石平, 『ならずもの国家·中国の本性—蹂躪されたチベット』, ワック, 2008; 櫻井よし子, 『異形の大国·中国—彼らに心を許してはならない』, 新潮社, 2008.

것이다. 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국제질서와 일본이 수용한 서구의 근대적 국제질서가 조선을 전선으로 해서 길항하고 있었던 것이 조선 해체기 동아시아의 현실이었다.<sup>4)</sup>

청일간의 긴장된 균형이 깨진 것도 조선에서였다. 청일전쟁은 중국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역전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제국 일본과 반식민지 중국 사이에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뒤에는 일본과 협력하는 ‘친일’에, 중국과 연대하는 ‘항일’이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패전국가 일본과 분단국가 중국의 영향력은 한반도에서 후퇴하는 듯했으나, 한국전쟁 이후 고착화된 냉전의 국제체제 하에서 한국은 일본과, 북한은 대륙 중국과 각각 (준)동맹 관계를 맺고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냉전기에는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과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각각 남북한을 매개로 한반도에서 길항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탈냉전기 이후 중국의 꾸준한 경제적 성공과 일본의 장기 침체로 중일간의 비대칭적 균형이 깨지고 국제적 위상이 역전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일본비평』 6호 특집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일관계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상과제로서의 중일관계’를 던져 보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서 중일관계에 대한 깊은 고찰은 많지 않은 듯하다. 중국 연구자에게 일본이 공백인 상태로 있고, 일본 연구자에게 중국이 공백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집은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일관계 연구의 한 시도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가 중국 연구자의 중일관계 연구를 불러와, 한국에서 중일관계에 대한 균형 잡

4)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외교사, 1866~1882』, 문학과지성사, 2001, 특히 제3장 참조.

힌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다섯 편의 특집논문들은 먼저 인식과 표상의 문제로서 중국을 다루고, 재일 중국인 사회를 사례로 중국의 부상에 조용한 일본사회의 변화를 추적한 뒤, 정치 경제적 과제로서 중일관계를 검토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주제를 흔쾌히 맡아 주고 글을 보태 주신 다섯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3. 일본인의 중국 인식과 중국 표상

양일모의 「'사상'을 찾아가는 여정: 일본의 중국 인식과 중국학」은 일본 중국학의 사상사적 계보를 추적하는 작업이다. 일본의 중국학은 고대로 '일본이라는 주체를 완성하는 타자'로서의 중국 연구였다.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중국은 '거대한 공통과 같은, 다면체'와도 같은, '시선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보이는 만화경'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의 결과로서의 중국학 그 자체보다는 중국을 논하는 자의 관점과 관념이 중요하다. 즉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 상상력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반중과 친중, 혐오감과 친밀감 등의 평가는 인식상의 표면적 속성에 불과하며, '인식이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에서 야기되는 복잡한 관계'이기에 '인식 주체의 시선'과 '인식 대상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중국학이 성립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인식 주체의 '시선상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저자가 주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이 세 명의 중국 인식이다. '시선상의 변화'가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 변곡점은 후쿠자와에 의해 마련되었다. 일본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동경과 모범의 나라'였다. 18세기에 집대성되는 '국학'조차도 모범으로서의 중국 인식의 반작용이었다. 그랬던 중국 인식이 '지나(支那)학'으로 상대화되는 계기가 후쿠자와의 『문

명론의 개략』이었다. 원래 중립적인 의미를 지녔던 ‘지나’가 멸시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유럽 문명의 기준인 근대화의 기준에서 볼 때 중국이 일본에 뒤져 있다는 생각이 일본인을 사로잡게 되면서부터였다. 나이토 고난(内藤湖南)에 와서는 ‘지나’는 ‘지렁이와 같은 저급동물’이라고까지 폄하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대륙침략은 제국경영의 학문으로서의 지나학의 영향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중국 인식의 두번째 변곡점은 다케우치가 마련했다. 전후, 서구 근대에 대한 저항과 혁명을 통해 진정한 근대를 이룬 중국이라는, 또다른 환상-동경의 대상으로서 중국이 재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 인식의 전환은 메이지 이래 일본이 추구한 근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서양에 대해 순응했던 근대화의 우등생 일본과는 달리, 서양에 대한 저항을 통해 보다 본질적 변화-혁명을 이끌어 낸 중국이 일본의 근대를 성찰하게 하는 본보기(鑑)라는 것이다. ‘방법으로서의 아시아’가 의도한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다케우치도 근대라는 시간축에서 사유하면서 단지 선진-후진의 배치를 뒤바꾼 데 불과하다. 미조구치에 의한 세번째 변곡점은, 유럽도 일본도 아닌,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중국의 길을 인정하는 데에서 마련되었다. 마침 탈근대 지구화의 시대에 들어, 중일 간의 국제적 위상이 역전되면서 인식의 대상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동시에 인식의 주체가 변화했다. 미조구치가 말하는 ‘중국의 충격’은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아시아(중국)와 이미 추월당하기 시작한 현실로서의 아시아 사이의 간극에 대해 무자각적인 일본인에 대한 경고였으며, 이를 갑자기 깨닫는 순간의 충격을 일컫는 말이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아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가 던진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이래, 일본은 ‘중국이라는 인식의 창을 통한 일본 사상의 탈주체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중국학의 열린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류젠후이의 「모멸, 취미, 그리고 동경에서 위협으로: 근대일본 지식인의 중국 표상」은 근대 이래 일본이 만들어 온 표상들을 추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중국 표상을 만들어 왔다고 지적한다. 개국에서 메이지유신에 이르는 제1의 흐름에 이어 제2의 흐름은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에 이르는 10년 동안, 제3의 흐름은 다이쇼 중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를 단위로 한 것이었다. 저자에 따르면 근대 초기 일본의 중국 표상 속에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서 객관적 입장에서 중국을 관찰하려는 태도가 보이며, 중국인과 중국사회에 대한 호의적인 기술도 눈에 띈다. 그런데 청일전쟁의 승리로 객관성이 붕괴되고 차별적인 중국상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다이쇼 중반기 이후, 중국의 전근대적 특징들이 근대를 상대화하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지표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퇴폐미’의 발견이며 ‘지나 취미’의 성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여유였다. ‘퇴폐한 중국’이 매력적인 것으로 지식인들에게 표상되는 것은 얼핏 메이지담론을 전도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본 중심의 오리엔탈리즘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지식인 일반이 지녔던 중국상은 ‘속죄적 중국상’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중국을 선진적이고 근대적이라고 평가하는 관점에 입각한 ‘동경적 중국상’이었다. 이러한 ‘자기부정적 동경’으로서의 중국상으로 인해서 문화대혁명의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이 점은 후술하듯이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민중국의 특권화’를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일본인에게 중국은 다시 동정의 대상이 되고, 향수를 자극하는 취미로 전락했다. 여전히 객관적인 중국상의 정립은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중국은 다시 모멸과 위협의 대상이 되어 각기 중국붕괴론과 중국위협론으로 표출되고 있다. 저자는 이를 ‘중국 없는 중국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 4. 중국의 부상과 변화하는 일본사회, 그리고 중일관계의 정치경제

손안석의 「대두하는 중국과 재일 중국인 커뮤니티의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내 중국인 사회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글머리에서 중국사회가 수치화할 수 있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의식과 생활에서의 변화를 수치로 포착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중국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단면인데, 이러한 자료들이야말로 변화하는 중국사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근거에 깔려 있는 것 같다. 또한 여기에는 재일 중국인 사회의 분석에 앞서서 모국인 중국사회의 변화를 배경지식으로 깔아 두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중국사회의 내부적 변화를 수치화하여 보여 준 다음, 저자는 재일 중국인 사회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일본 내 화교사회의 다양성이다.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재일 중국인 사회가 일본 국내 각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이며, 시기적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 화교사회가 일본의 역사와 지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자칫 간과하기 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저자는 시기별로 나가사키, 고베, 요코하마 등 세 곳의 중국인(화교) 사회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 다음 저자는 현재 재일 중국인 사회의 변화가 1980년대 이후 일본에 진출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1990년대 이후 신화교로 등장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에 일본에 진출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모국 중국의 경제적인 성공과 자신의 학업에서 얻은 지식으로 일본 내에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도쿄의 이케부쿠로(池袋)에 새로 형성된 차이나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인데, 2010년 3월 일본정부는 제4차 출입국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인 수용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로부터 저자는, 신화교 지식인의 입을 빌려, 새로운 차이나타운의 정착에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철호의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중국: 구상과 현실」은 ‘동아시아의 귀환’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조건 속에서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현실을 검토한 것이다. 저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입각하면서도 이들의 접근법이 무의식적으로 베스트팔렌식 국제정치, 즉 주권국가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새로 만들어 낸 아시아적 특수성에 주목하고, ‘탈국제(post-international)정치’로서의 동아시아지역주의가 ‘전국제(pre-international)정치’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수성 때문에 일본의 지역주의 정책이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특수성이란 미국과 중국 등 제국적 국가의 존재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미일동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대중관계의 자율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개입과 방기를 동시에 우려하고, 그 사이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것, 이것이 일본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의 근간이며,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이중성이 이에 비롯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편 동아시아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진단은 다음과 같다. 저자는 일본에서 본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입각해 있던 ‘아시아 중시론’의 입장은 점차 협소해지고, 이와 대척점에 있는 ‘미일동맹 중시론’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후텐마 기지 문제로 불거졌던 미일갈등이 북한 문제의 처리를 둘러싼 미중대립의 격화 속에서 진화·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는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경제적 다자주의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이익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옮겨 갔다. 중국이 부상하는 만큼 일본은 미국으로 기울어지고, 그만큼 일본의 지역관은 동아시아를 벗어

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국 동아시아공동체(론)의 성공 여부는 일본의 ‘근본적 사고의 전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김규관은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중 경제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 춘철 연휴 동안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행태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보도 양태는 한국사회에서도 중국의 경제적 이미지가 ‘값싼 노동력’에서 ‘통큰 구매자’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이와 동시에 ‘중국리스크’를 강조하는 ‘중국붕괴론’과 ‘중국위협론’도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들어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리스크’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중국관이 과연 경제적 중일관계에서 객관화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중국경제의 부상을 여러 경제지표들로 꼼꼼히 확인하고,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중국의 위협요인을 정리한 뒤, ‘중국위협론’이 중일 경제협력에 미친 영향을 ODA 공여 중단과 동중국해 에너지협력 등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정치외교적 함의를 지닌 ‘중국위협론’이 무역과 직접투자 등 순 경제적인 중일 경제관계에 적용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선례에 비춰 볼 때 중국이 ‘중진국의 덩’에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며, 중국이 선진 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해소해야 할 문제들은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리스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대중 외교의 측면에서 ‘중국리스크’ 또는 ‘중국위협론’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경제영역에서 볼 때 여러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양국 경제는 상호의존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중국붕괴론’이나 ‘중국위협론’에 대해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 이것이 숨겨진 결론이라 하겠다.

## 5. 중국의 '민주화'와 일본의 지식인들

이상의 특집논문에 더해 이번 호에서는 두 편의 '논쟁적' 특집시론을 준비했다.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의 글 「일본 지식인과 중국문제」와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의 글 「일본 매스미디어의 혐중국과 중국의 '민주」」는 다분히 서로를 의식해서 쓰인 것들이다. 둘의 긴장된 관계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작년에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출판된 류샤오보 문집에 마루카와가 「해설」을 단 데 대해 고야스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출판은 올바른 것인가: 이와나미서점의 류샤오보 문집 간행에 대한 커다란 의문」(この出版は正しいか—岩波書店『劉曉波文集』刊行の大きな疑問)<sup>5)</sup>을 실어 이를 비판하고 있다. 류샤오보에 대해 일관해서 무관심했던 이와나미서점에게는 류샤오보 문집을 출판할 자격이 없으며, '부정'한 일이기까지 하다고 것이 고야스의 비판이었다. 특히 옹골치기인 마루카와가 「해설」을 달아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을 '비판'한 것은 상업주의적 퇴폐 이하의 짓거리이며, 마루카와는 중국정부의 대변인이 되어 버린 것이라며 신랄히 비판했다. 이번 호에 게재된 고야스의 글은 이 비판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 19세기 이래 중국문제에 대한 일본 지식인의 태도를 전개하는 위에 풀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야스는 일본이 중국과의 본질적인 이웃관계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고 하여 그 해답을 역사적으로 소급해서 찾고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사회적 진보와 변화를 억압하는 일원적 전제 지배의 중국 이미지를 처음으로 일본인에게 제시한 것이 본질적인 이웃관계 수립을 방해하는 시발적 요인이 되었다. 이어서 일본은 '동아'의 발견을 통해 아시아에서 중국의 주변화를 의도했

5) 고야스 노부쿠니의 홈페이지 참조[<http://homepage1.nifty.com/koyasu/remark.html>].

으며, 전쟁이 아닌 사변으로 불렸던 중일전쟁은 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도 ‘본질적으로’ ‘결착’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고야스의 기본적 인식이다. 이러한 지적은 아마도 마루카와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일 테다. 따라서 일본의 과제는 이웃 중국과 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위구심을 가지는 데에서 마루카와와의 사상적 분기점이 발견된다. 고야스의 위구심이란 ‘민중적 요구를 국가의 정치과정으로 매개하는 민주적 회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체제변혁에의 가능성을 공산당 이외의 다른 세력에게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일당독재의 국가적 정치상황’이다. 이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본질적 이웃관계를 만들어 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야스의 주장이다. 그것은 또한 현재의 중일관계가 ‘본질적으로 냉담한 관계’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중국과의 본질적 관계를 만들어 보려는 과거의 노력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야스는 중국의 변혁 과정에서 고난을 함께 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기타 잇키(北一揮), 다치바나 시라키(橋樑), 오자키 호쓰미(尾崎秀実) 등에서 찾고, 이들을 ‘긍정적인 의미의 아시아주의자’들로 부르고 있다. 반면 다케우치 요시미 등의 친중국파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인민중국의 전면적 승인을 특징으로 하는 다케우치의 중국관’이 ‘인민중국의 특권화’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는 중일 간의 본질적 관계 구축에 장애요소인 바, 진정한 ‘아시아주의’는 일본과 중국이 자기혁신을 함께 함으로써 찾아가는 진정한 연대이며, 이 연대로부터 중일 간의 본질적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마루카와의 글은 보다 본격적으로 중국의 ‘민주화’ 문제와 이를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선을 문제 삼고 있다. 물론 고야스의 비판「이 출판은 올바른 것인가」를 의식한 글이다. 글 제목에서 민주가 인용부호(‘ ’, 원저에서는「」) 안에 들어가 있는 데 마루카와의 생각이 담겨 있다. 중국에서 민주를 논할 때 중국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민족(내셔널리즘)과 민중(생존권)의 문제로 제

기되는 민주화의 요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 내 민주주의 요구는 민족의 자유, 주권 옹호의 형태로 표출되어 왔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생존권 투쟁의 형태로 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당히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루카와는 이를 세 차례의 '보위조어대(保卫钓鱼台)운동'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첫번째 보위조어대 운동은 1971년 미국이 진원지가 되어 타이완으로 확산되어 전개되었다. 운동은 영토 내셔널리즘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중화민국의 냉전 독재체제에 대한 이의제기운동이며, 타이완 최초의 민주운동으로 기록되었다. 두번째 보위조어대 운동은 1996년 홍콩의 중국반환을 앞두고 홍콩의 민주파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것으로 중국의 민주를 추구하는 흐름에 편승한 운동이기도 했다. 세번째 보위조어대 운동은 2010년 센카쿠제도 근해에서의 중일 간 충돌을 계기로 한 운동이다. 마루카와는 이 운동이 '지방'의 '저소득층' '청년층'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운동과 구별되며, 생존권 투쟁이자 경제민주화 운동으로서 '민중'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마루카와는 세 번의 운동이 중국 내부에서 '민주'의 태동을 보여 주는 것이며, 중국에서 '민주'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민족'의 자유와,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의 생존권과 맞닿아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일본에게 류샤오보 문제, 그리고 그가 제기한 '08헌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마루카와는 중국 내부의 민주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상황 깊숙이 내시경을 쫓아 관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민주'의 보편적 원리에 충실하기보다는 중국의 독자적 발전단계-역사를 고려한 내재적 이해 위에서 '민주'의 문제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점에 입각해서 마루카와는 류샤오보가 미국 네오콘의 독트린이 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적 중언론'을 답습하고 있는 점, 그 입장에서 중국의 개혁을 논하려는 태도를 문제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마루카와의 태도가 중국에 투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유효한 비판을 전개

하지 못하는 류샤오보 및 그 지지자들과 거리두기. 이것이 마루카와의 선택이었다. 나아가 그는 “일본 자신의 ‘민주’에 실천적 관심을 갖지 않는 인간은 중국의 ‘민주’에 대해서 운운할 힘이 없다”고 하여 중국의 비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의 외피를 쓴 혐중국론을 나무라고 있다. 그렇다면, 고야스가 초국가주의자이자 우익의 정신적 지주로까지 불리는 기타 잇키를 ‘긍정적인 아시아주의자’에 포함시킨 데 대한 마루카와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마루카와는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의 예를 들어, 자국의 민권운동에 실패한 뒤 중국으로 달려가서 신해혁명에 깊이 관여했으나 후에 우익이 되어 만주사변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이 마루카와의 고야스에 대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야스와 마루카와는 각각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원리적 사고와 역사적 사고를 대변하고 있다. 둘 사이의 긴장은 30년이라는 세대차(1933년생의 고야스와 1963년생의 마루카와)를 일정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두 사람의 문장을 『일본비평』 6호에 함께 실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 생각된다. 기꺼이 원고를 보내 주신 두 분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둘의 긴장관계가 일본 내에서 건전한 중국 이해를 이끌어 내는 건 강한 긴장관계이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호 특집시론이 한국의 중국 이해에 두께와 깊이가 더해지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

\* \* \*

이번 호에는 특집서평과 연구노트, 연구논단이 한 편씩 준비되어 있다.

이동준의 특집서평은 바바 기미히코(馬場公彦)의 『전후 일본인의 중국상』(2010)과 이노우에 마사야(井上正也)의 『일중 국교정상화의 정치사』(2010)를 소재로 ‘일본이 본 중국, 일본 속의 중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권은 모두 박사학위 논문을 원작으로 한 것으로, 전후부터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에 이르는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2000년대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벌인 격투의 결과



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일본인의 중국 이미지’를 후자는 ‘일본의 대중국 정책’을 주제로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서평자는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도쿄재단이 펴낸 『일본의 대중국 안전보장전략』(2011)을 함께 고찰하여, 일본 민간의 중국 인식이 대중국 정책에 어떠한 경로로 반영되는지 그 일례를 살펴보고 있다.

서평자는 일본의 매스컴에 등장하는 선동적 중국 이미지의 이면에 차분한 중국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2010년에 출판된 두 책의 의의를 인정하고 ‘중국을 객관화하기 위한 일본 학계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서평자는 우선 패전 이후 중일수교의 1972년까지 일본 국내의 종합교양잡지 게재 기사 2,500여 건을 분석한 바바의 저작 『전후 일본의 중국상』을 소개한 뒤, 종합교양잡지의 위축과 함께 영상매체가 득세하는 이후의 시기에 선동적 중국상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편 이노우에의 저작 『일중 국교 정상화의 정치사』에 대한 검토에서 서평자는 중일관계에서 ‘대만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정당히 평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 본토와의 국교회복에 더해 대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서평자는 ‘성공적인 대중관계 복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이노우에의 저작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중관계라는 보다 큰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미중관계에 대한 서평자의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된다.<sup>6)</sup> 마지막으로 도쿄재단의 보고서가 결론 부분에서 통합, 균형, 역지의 전략을 적절히 배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데 대해 서평자는 이 제안을 내용적으로는 역지와 균형에 주안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 정재호는 한국이 취할 대중정책으로 관여(engagement), 균형(balancing), 위협

6) 서평자의 다음 저작을 참조. 李東俊, 『未完の平和: 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変容, 1969~75年』, 東京: 法政大学出版局, 2010.



분산(hedging) 전략으로서 ‘명민외교’를 권고하고 있는데,<sup>7)</sup> 한국 정부가 취하는 전략 여하에 따라서는, 일본이 대중 억지와 균형에 치중할 경우 중국의 부상을 대하는 양국의 태도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관계에서도 전통적인 미국 요인만큼이나 중국 요인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윤상인의 연구노트 「호텔과 제국주의: 우리 안의 ‘반도호텔’들에 대해」는 ‘반도’(peninsula)를 둘러싼 기억 속의 역사기행이다. 글은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의 커피숍 ‘페닌슐라’의 추억에서 시작되어, 시공을 중횡무진하며 우리 주변에 살포시 자리잡은 ‘제국의 상징권력 공간’들을 드러내 보여 준다. 식민지에서 해방, 개발독재로 이어지는 시간들, 그리고 조선과 싱가포르, 홍콩 등의 공간들을 넘나들며 진행되는 글은 ‘반도’와 ‘한토’와 ‘페닌슐라’에 얹힌 이야기들을 긁어모아, 식민지 이후의 식민지적 현실, 즉 ‘포스트 콜로니얼’(post-colonial)한 현실 속으로 독자를 이끌어 간다. 윤상인이 부제에서 말하는 ‘우리 안의 반도호텔들’이란, 곧 ‘우리 안의 식민지들’이다. 예전에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의 한반도 그림이 유행한 적이 있다. ‘한반도=호랑이’는 한반도를 토끼로 형상화하는 데 대한 반명제였다. 거친 시베리아 벌판을 향해 포효하며 왕처럼 군림하는 호랑이가 한반도의 지도에 겹쳐 있는 모습은 많은 이에게 일종의 유폴리아(euphoria)를 안겨줬을 것이다. 유폴리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주변 열강의 먹잇감인 토끼일 리 없다는 믿음을 안겨 주는 그 그림에서 안도감을 느낀 사람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 이건 토끼이건 그것이 한반도를 근거로 한 자의식의 발로라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면? 더구나 그러한 자의식이 ‘한토진’(반도인)이라는 ‘타칭’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향수를 자극하며 수수께끼 풀이처럼 궁금증을 안겨 주고 풀어 주는 윤상인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해답은커녕 해법 찾기조차 녹록지 않은 묵직한 문제에

7)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4~6쪽.

맞닥뜨리게 된다.

연구논단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와 『고코로』」는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의 엮은이로서 전후 일본의 ‘일상적 보수’와 ‘보수의 일상성’에 주목해 온 장인성의 후속작업이다. 잡지 『고코로』(心)는 전후 일본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전후 체제 형성과 경제성장의 맥락에서 문화적 보수주의의 사유를 표출한 장이었다. 그간 『고코로』 그룹은 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에서도 학술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저자도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진보 지식인의 사상에만 주목했던 연구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는 바, 그런 의미에서 장인성의 글은 이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분석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장인성은 『고코로』에 모여든 ‘올드 리버럴리스트’들의 군상을 통해 패전에서 살아남은 전후 교양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재구성하고 있다. 『고코로』는 『세계』(世界)의 정치적 혁신주의, 사상적 진보주의에 대립해서 보수주의를 옹호하고, 『사상의 과학』(思想の科学) 그룹의 과학주의에 대립해서 문화주의를 옹호하는 데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두고 있었다. ‘과학(science)도 신화(mythos)도 없다’는, 즉 좌도 우도 아니라는 전후 사회과학 진형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애매성이 일본 국민의 문화적 정서에 부합했다는 지적, 그 때문에 『고코로』 그룹의 지식인들이 ‘문화상의 내셔널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은 일본의 사상지형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보수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어 크게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저자는 ‘삶과 의지’, ‘개체와 전체’, ‘자유와 질서’, ‘전쟁과 평화’ 등의 주제어로 『고코로』 그룹의 사유를 정리하여, ‘고코로 보수주의’의 문화주의와 교양주의의 진수를 추출하고 있다. 한편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올드 리버럴리스트’가 지켜 냈던 교양주의가 자연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건전한 일상적 보수주의’가 퇴장하여 생긴 공간에 ‘투쟁적 정치적 보수주의’가 출현하여 9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보수화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다는 진단은 ‘보수주의’에 대한 천착의

결과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주로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진영, 즉 진보적 지식인들에 주목해 왔던 필자에게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한 가지 이번 호의 특집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고코로』의 지식인들이 그린 아시아, 특히 중국의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는 저자가 애초에 제기한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질문이다. 다만 이번 호의 특집논문들과 특집시론을 읽고 저자의 글을 읽게 되면, 가령 ‘개체와 전체’, ‘자유와 질서’ 등에 대한 『고코로』 그룹의 사유를 정리한 글들의 행간에서 그들의 아시아(중국) 인식의 단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